
「2020-3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5. 25.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 최근 경제동향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기획재정부 통계청 KDI한국개발연구원
2. 재정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 코로나19 사태와 IMF 재원 확충 •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현황 분석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예산·재정 관련법령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 「농수산물조급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 공유경제, 지방자치단체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강원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5.20.)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 2020년 5월 최근 경제동향

- 3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전월대비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감소
- 4월 고용은 취업자 감소폭 확대, 물가는 상승세 둔화
- 4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 환율은 소폭 하락, 국고채 금리는 하락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 수출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위험 확대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 가계동향조사: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조사
- 소득은 535만 8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근로소득 1.8%, 사업소득 2.2%, 이전소득 4.7% 증가)
- 지출은 394만 5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소비지출 6.0% 감소, 비소비지출 1.7%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 10.5% 증가, 의류·신발 28% 감소, 오락·문화 25.6% 감소, 교육 26.3% 감소)
-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만 3천 원으로 38.4% 증가(평균소비성향 7.9% 하락)

[바로가기](#)

통계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 (문제제기)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점증
- (거시경제 전망) 한국 거시경제 경로에 대한 전망을 시나리오별(기준, 상위, 하위)로 분석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위 시나리오	0.3	1.8	1.1	4.9	2.6	3.7
기준 시나리오	-0.2	0.5	0.2	4.6	3.3	3.9
하위 시나리오	-0.7	-2.5	-1.6	2.8	4.8	3.8

- (정책적 시사점)
 - 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의 GDP는 기존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며, 향후 GDP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②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함
 - ③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방지해야 함

[바로가기](#)

KDI한국개발연구원

02	재정	출처
	<p>■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동시 발생,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추진목표) ‘경제구조 고도화+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 추진 - (추진방향) 사람 투자를 통한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3대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및 10대 중점과제’ 선정·추진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 코로나19 사태와 IMF 재원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각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국고가 빠르게 소진됨은 물론 자본 유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적인 유동성 위기의 최종 방어자로서 1960년대에 고안된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신흥국은 물론 빈곤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방어벽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SDR 발행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u>별도제공</u></p> <p>■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현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 2013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체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총 1,464건, 총사업비 9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강원도는 2.6조 원이며, 인구를 고려한 연평균 1인당 총사업비는 전국 평균 295,342원, 강원도는 280,795원임 - 2019년도 이력관리 기준으로 추진 및 완료단계 사업은 1,232건이며, 이중 중단된 사업 65건, 준비단계 또는 추진단계의 사업비 및 일정 정보가 불명확한 분석불가사업 91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628건, 완료된 사업 448건임 -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당초 계획 대비 완료 시 총사업비가 감소하였고, 공사 준공 지연은 계획 대비 11.1개월임 - 완료사업 448건을 대상으로 준비단계 대비 완료단계의 국비 지원규모를 검토한 결과, 당초 대비 실제 5,109억 원이 감소함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기획재정부</p> <p>한국금융연구원</p> <p>한국지방행정연구원</p>

0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p>■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개정·시행 '20.4.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300억 원 이상), 투자심사 횟수 확대(매년 2회→3회), 타당성조사 횟수 확대(매년 1회→2회) - 재심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총사업비 30% 미만 증가 사업 제외,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및 부지위치 변경 사업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4.28. / 시행 '20.4.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협의 및 승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기존 최대 2억 원) 하며,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한 자에게 예산 낭비신고포상금(1천만 원의 범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제정·시행 '20.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자발적 기부금 모집을 가능하도록 함('20.12.31.까지 유효)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 '20.5.1. / 시행 '20.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 함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개정·시행 '20.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 함 <p style="text-align: right;"><u>바로가기</u></p>	<p>법제처</p> <p>법제처</p> <p>법제처</p> <p>법제처</p> <p>법제처</p> <p>법제처</p>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개정·시행 '20.5.19.)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유지를 특례적용대상에 포함하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한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하려 함

[바로가기](#)

법제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개정 '19.12.31. / 시행 '20.5.1.)

-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2020년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 시행,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규형을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려 함

[바로가기](#)

법제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개정 '20.4.28. / 시행 '20.5.1.)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 함

[바로가기](#)

법제처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 '20.5.19. / 시행 '20.11.20.)

- 의무자조금단체외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 확대,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 함

[바로가기](#)

법제처

■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 (연구내용)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함
- (결과) 광역과 기초가 자기책임의 기초 아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 도출
 - ②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
 - ③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 ④ 세목교환으로 기초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광역의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 ⑤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학회

■ 공유경제, 지방자치단체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

- (현황 및 필요성)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 미국, 영국, 일본을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 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례) 국내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도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를 들 수 있음
* '19.4월 기준,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8곳 조례 제정·운영 중
- (결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정책추진 기본방향 및 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별 세부 전략(비즈니스형, 사회관계추구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자원활용형),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 (발생현황과 영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
- (대응과정-사회경제정책 중심)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타격을 입기 시작, 비록 유럽국가들과 같은 봉쇄 조치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음
- (피해계층 추정) 전통적 영역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근로빈곤 및 취약 계층인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있으며, 과거의 위기 상황과 다르게 소득 2~3분위부터 넓게는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3~4분위에 속하는 제조업·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하며, 특히, 자영업자 그룹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임
- (사회정책 방안) 취약 및 근로빈곤층 지원 방안으로는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있으며, 중간계층 생활보장 방안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단기 위기상황 극복과 가구 내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분배정책(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바로가기](#)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책이며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
- (CARES Act의 제정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감염자수가 급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이동금지 명령과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금융시장 악화→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CARES Act의 주요 내용) 2020. 3.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23일 통과되었음
- (시사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CARES Act」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바로가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

- (지역소멸 위기의 새로운 대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정책 현황)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근거 법령은 부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근거로 사업 추진
 - * 기본법안은 2017년 대표발의 되었으나, 20대 국회 계류중
 - * 강원도 시·군 지원 조례 제정률(72%)은 기초자치단체 제정률(80%)에 비해 낮은 수준(2020년 기준,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제정)
 -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4.1월 제정
- (사업현황) 2014~2019년까지 609개소 마을공동체에 약 36억 원 지원
- (실태조사) 운영예산 및 인력부족, 공동체와 행정 간의 괴리, 운영사업 지원·관리 부족의 문제점 지적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방향)
 - ① 법적 근거 마련: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② 지원기반 조성: 현장밀착형 사업지원을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 광역-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 ③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마을공동체 간, 유관기관 간)

[바로가기](#)

■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 (서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17)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포함하고,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2018.4.4.),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을 수립함
- (현황)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에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가능 교실 5,000실을 더 확대하고, 2017년 약 33만 명의 초등학생을 2022년까지 약 53만 명이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하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2017~2019년까지 3년간 설문을 진행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 분석내용: 학부모의 방과후 장소 선택,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의 방과후 장소 선택 결정
- (효율적 운영방안) 효과성 분석을 통해 초등 돌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 ①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 ② 학기 외 시간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
 - ③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④ 직정 돌봄교사 수 확보
 - 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중장기 통합 운영
 - ⑥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KDI한국개발
연구원

■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2019년도 말 기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약 6조원)이 코로나 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
-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사업 목적으로 용자하여 활용
-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 설정
-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
 -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20.5.21.)를 열고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을 논의함
- 코로나19 이후 고용정책으로는 실업과 소득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축소하여 포용적 고용체제를 구축하고, 재직자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교육훈련의 기회로 활용하여 인적 경쟁력을 높힐 것을 제시함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5.7.)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함
- 이번 안건은 기존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방향을 추가·보완한 것으로, 코로나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에 신속·과감한 투자를 하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임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임
-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과 본예타의 역할 분담,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 정책-예산-평가 연계 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임
- 이번 제도를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정부는 지난 5.15일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을 위한 총 4개 분야·28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

〈4개 분야·28개 과제〉

- (분야1)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환경개선 -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 (분야2)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 구제 기반 강화 - 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 (분야3) 소비자 권익 보호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 (분야4)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 특수 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5.20.)

- 기획재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주간의 경제 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Ⅱ),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 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